「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2016 가을): 299-32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3 (2016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0.3.14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와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송 정 안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심이 아닌 참여제약에 의해 설명하고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참여제약에 의한 개인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참여제약 관점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원·기회 제약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참여제약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 개인들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원봉사 개인차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2015년 행정자치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정부지출 자료와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만 19세 이상 34,304명을 대상으로 일반화된위계적선형모형(HGL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에서 시간·지식의 자원제약과 네트워크 기회제약은 유의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이러한 제약들에 의한 개인 차이를 조절하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원봉사, 합리적 선택, 참여 제약, 자원봉사정책, 거버넌스

Ⅰ. 서론

자원봉사연구는 그간 주로 개인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Wilson, 2010). 이러한 경향의 자원봉사연구는 나이, 성별,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개인 차이를 발견해왔으며(강철희, 2003; 김성경, 2009; Musick & Wilson, 2007; Sundeen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자본 형성, 사회통합에의 기여, 공공서비스 생산의 협력자 등 점차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주목받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의 자원봉사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탐색적인 기술적 연구 경향은 자원봉사활동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구축·구인효과")의 일부(구인효과)를 수정한 것이며, 아름다운재단 '2016기부문화석박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의 개인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공백을 낳고 있다. 둘째,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개인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정부가 대응해야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근거를 마련할 수 하는가 등의 있는 설명적인 경험적 연구로서의 자원봉사정책 연구 또한 충분히 축적되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이민창, 2008).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자원봉사정책의 영향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탐색적으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투입을 통해 '누가 참여하는가'라는 질문 위주로 자원봉사 개인차를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왜 참여하지 않는가'의 참여제약 관점의 분석(Brady et al., 1995)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는 자원봉사활동도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를 갖는 관점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일 자원봉사가 합리적 선택이라면 개인은 제도적으로 개인이 처한 제약이 완화되거나 악화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자원봉사정책은 그 중 매우 직접적으로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러한 개인과 정책 간의 역동성을 조망해주며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논증이 시작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에 대한 접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원과 기회와 같은 참여제약에 따라 개인의 자원봉사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자원봉사정책은 개인들의 참여제약에 의한 차이를 조절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질문을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풀어가 보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검토로서 왜 개인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개인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시민참여제약의 원인을 분류한 Brady 외(1995)의 연구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합리적 선택 관점을 분석한다. 개인수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차이에 대한 지역수준의 정부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론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자원봉사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각 지역에 속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원봉사연구와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1. 자원봉사 참여제약과 자원봉사 개인 차이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심의 자원봉사연구

역사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비영리섹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어

확장되어왔다(Kidd, 2002). 그간 자원봉사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공유하며 어떠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관찰해왔다. 나이, 성별, 인종, 혼인, 장애, 학력, 소득 등 다양한 특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정도 및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나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영향관계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Inglehart(2003)의 31개 국가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자원봉사와 나이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한국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기간과 빈도가 컸다(강철희, 2003). 한편, 나이와 자원봉사의 참여정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성경, 2007).

성별 역시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의 성별 차이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Andreoni et al, 2003; Mesch et al., 2006), 남성과 여성 간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 Chang, 2007). 한국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김성경, 2009; 김태홍 외, 2007), 참여율이 아닌 회수, 시간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김태홍 외, 2007).

혼인 여부 역시 자원봉사참여 정도에 영향을 준다. 대체로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Wilson, 2010). Taniguchi(2006)는 특히 혼인상태라는 가족 특성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남녀 간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도 보여주었으며, 김태홍 외(2007)에서도 미혼에 비해 기혼자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요인으로서 특히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기, 2009; 이진이·김태완, 2015; Wilson, 2010; Wilson & Musick, 1997). 이는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기부, 단체활동, 정치참여 등 여러 유형의 시민참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Smith, 1994). 그러나 이용관(2015)에서는 교육·소득수준이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김태홍 외, 2007; Lee & Chang, 2007).

한편,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고용 여부)는 소득수준과는 구별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관(2015)은 소득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자원봉사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Apinunmahakul 외(2009)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 여부는 소득수준과 달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 여부는 장애인들이 자원봉사 참여자보다는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강하게 인식되는 점으로 인해 아직 국내외 공식 통계들에서 참여자 요인으로 잘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장애를 지니는 사람들 역시 자원봉사 참여자로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학적인 기회(Trembath et al., 2010), 심리·의학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있으며 질적 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강한 참여 의향과 동기들이 알려지고 있다(Bruce, 2006).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그간의 자원봉사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자칫 단순한 영향요인들의 제시에 그칠 뿐 왜 특정 영향이나 개인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의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검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연구들마다의 상충하는 결과의 이유를 알아낼 근거를 발견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기존 연구 관점의 극복 일환으로 다음에서는 개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가의 참여제약 관점과 이러한 관점이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참여제약 중심의 자원봉사연구: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

Brady 외(1995)에 따르면, 개인들은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서 제약을 받는다. 첫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can't'), 둘째, 개인적인 관심의 제약으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don't want'), 셋째,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not asked')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Brady 외(1995)의 구분에 따라 자원의 제약, 관심의 제약, 기회의 제약에 의해 자원봉사활동 역시 개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자원의 제약은 다시 시간 자원(time), 금전적 자원(money), 활동에 필요한 지식·기술 자원(skills)으로 나뉜다(Brady et al., 1995: 273). Musick 외(2000) 역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약을 분석하며 자원봉사도 일종의 생산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시간, 금전적 자원, 기술을 중요한 자원활동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한 바 있다. 시간, 경제적 여건, 지식 및 기술은 개인의 보유하고 있는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자원의 획득과 축적의 용이함이 다를 수밖에 없다(Sundeen et al., 2007; Wilson, 2010). 이러한 자원의 유형과 유형별 자원의 양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어 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자원봉사활동이 무급의 자발적인 봉사이지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을 말해주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합리적 선택'(Lee & Brudney, 2009)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들은 소득, 교육, 시간 등의 여러 유형의 자원과 자원의 양에 따라 행위하며, 이러한 자원의 분포가 달라지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자원 공급자인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umkin(2009) 역시 비영리활동은 서비스 공급자, 즉, 가치, 표현, 이해 등의 비영리행위자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자원봉사연구들에서 두 번째 장애요인인 관심의 제약은 세 번째 장애요인인 기회의 제약과 함

께 다루어지고 있다(Lukka & Ellis, 2001; McBride, 2006; Sundeen et al., 2007; Wilson, 2010). 이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모든 경우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 기회에 노출되지 못하거나 요청을 받지 못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문제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이며 특정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활동을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 사회적 배제나 기회의 불균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Brady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도 관심의 제약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자원의 제약에 이어 기회의 제약만을 다루고자 한다.

기회의 제약은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경로의 문제와 이와 무관하지 않은 특정 그룹에 대한 관습적인 참여 배제의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 연구들에서 나타난다(McBride, 2006; Turner, 2006). 이러한 점에서 자원봉사연구들은 네트워크와 참여관습의 문제를 기회제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Lee와 Brudney(2009)는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원봉사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직접 요청받을 확률도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 때 네트워크 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단발적 자원봉사보다 지속적인 자원봉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Rotolo & Berg, 2010). 네트워크 노출 여부 및 정도에 관여하는 개인의 생활패턴으로는 단체참여, 학교생활, 가족과의 동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Wilson, 2010).

그런데 네트워크 요인과 더불어 기회제약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참여관습과 이로 인한 상대적인 참여배제의 문제이다. Sundeen 외(2007)은 자원봉사에 대한 무관심은 나이가 많을수록, 비주류 인종일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문화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보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그룹이라는 인식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 참여관습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원봉사가 덜 요청되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ukka와 Ellis(2001) 역시 자원봉사가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서 참여의 차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즉,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이미 형성된 참여의 관습, 신화, 고정관념 등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영국에서 자원봉사는 장애인은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이지 참여자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시간이 많은 중년의 중산층 여자들이 주로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Musick과 Wilson(2007: 290)은 모든 이들이 자원 봉사참여를 권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영리조직들이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참여역량이 높은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회제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룹은 장애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Granville, 2000; Hustinx et al., 2010; Miller et al., 2002; Musick & Wilson, 2007; IVR, 2004).

자원봉사활동은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수집, 신청, 연계, 활동,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오세영, 2011), 이를 거쳐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히 기회제약에 민감한 그룹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네트워크에 속해있음으로 해서 자원봉사 정보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쉽고 활동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Lee와 Brudney(2009) 역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가 단지 좁은 의미의 자원 제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네트워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관련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참여관습에 의해 배제되기 쉬운 그룹 역시 같은 이유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당연시되는 그룹 대비 높은 거래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자원봉사는 분명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개인들은 기회제약에 다르게 노출되어 있어 고르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자원과 기회의 제약과 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룹들은 저조한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예측된다. 이는 자원과 기회의 제약이 모두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원과 기회가 풍부한 그룹 대비 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닌 세 가지 두 가지 제약(자원과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참여 차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가설1. 자원과 기회 제약을 많이 받는 개인은 그렇지 않는 개인보다 자원봉사 정도가 저조할 것이다.

2. 자원봉사 정부지출과 자원봉사 참여 개인 차이

1) 한국의 자원봉사정책과 정부지출

한국의 자원봉사정책은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모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기초단체에 총 247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서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 정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이전 199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먼저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초단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센터 설치가 완료된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통해서였으며 해당 법률 체계 안에서 센터 지원의 규모가 확장되고 자원봉사관리 또한 보다 체계화된다(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4).

자원봉사센터라는 독특한 비영리조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봉사자원 개발 및 연계라는 목적에 특정하는 자원봉사개발 인프라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고 있다.[1] 국제적으로는 비교적 최근 확장되고 있는 비영리조직 인프라 유형으로서 자원봉사정책 발생 시기와 유사하게 1990년대에 확산된다(van den Bos, 2012. Lorentzen & Henriksen, 2014에서 재인용). van den Bos(2014: 17)에 의하면 미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

1)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www.iave.org).

덜란드, 노르웨이 기준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Brudney & Woodworth, 2014에서 재인용).

자원봉사자들을 구인하기 위해 선택되는 정책수단들도 여러 국가들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된다(Pennen, 2003. Haski-Leventhal et al., 2010에서 재인용). 자원봉사센터라는 인프라에는 모든 인프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기기 외 설치 목적에 관련되는 자원봉사관리 전문화,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자원봉사자 보호, 자원봉사자 교육, 인정보상, 자원봉사-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과 관련된 투입이 이루어진다.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센터 기능은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크게 여섯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셋째,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넷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다섯째,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여섯째,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투입은 크게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일반관리부분과 시민사회 파트너와의 협력에 특화된 협력관리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파트너는 다시 비영리조직과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다. 집행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은 자원봉사에 관련된 모집, 교육, 홍보, 정보, 보호, 인정보상 등으로 특화되고 있음이 관찰된다(행정자치부, 2015). 이상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종합하여 이들의 투입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인프라 일반 영역	시민사회 협력관리	
	시민사회·지역사회	개별 시민 (자원봉사자)
예산, 인력, 직원교육 설비 투입, 운영 행정일반관리 지원	자원봉사자들을 비영리조직 연계 시민사회 파트너십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자원봉사 홍보 및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 보호, 인정보상 자원봉사활동 인증

한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자원봉사정책의 거의 모든 지출을 포괄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재원의 구조는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비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로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지출 내용은 자원봉사자상해보험과 자원봉사센터 1인 코디네이터(비정규 인력) 인건비만이 포함되고 있다.

〈표 2〉 자원봉사센터 예산 변화 추이 (2005-2014)

연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2005	30,691	-	8,027	22,664
2006	30,751	1,670	8,262	20,819
2007	46,360	4,105	12,363	29,892
2008	60,122	5,845	15,575	38,702
2009	64,888	5,454	15,587	43,847
2010	68,534	5,454	15,181	47,899
2011	73,113	8,053	16,837	48,223
2012	79,206	7,505	16,562	55,139
2013	81,864	6,719	19,190	55,955
2014	86,560	7,052	24,316	55,192

자료: 2015 자원봉사센터 현황 (안전행정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단위: 백만원

2) 자원봉사 정부지출과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

제도는 평형상태(equilibrium)로서, 규범(norm)으로서, 규칙(rule)으로서의 제도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Crawford & Ostrom, 1995). North(1990:3)에 따르면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사회 내 게임의 규칙으로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제약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규칙으로서의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제도는 작동의 결과 예측불가능하거나 자의적인 결과를 내놓지도 않는다(Shepsle, 2006). 제도는 오히려 게임의 규칙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교환의 이익을 낳는 경향이 있다(Weingast, 1979). 따라서 제도는 편익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데 기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제도가 구조화하는 사회적 평형상태(structure-induced equilibrium)를 가져오게 된다(Shepsle, 1979).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참여에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tadelmann-Steffen, 2011)나 시간자원이 부족한 사람들(피고용인)의 경우는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참여를 구인(crowd-in)한다는 분석결과(Bartels et al., 2013), 공립학교들의 청년자원봉사정책이 여성 대비 남성 그룹의 자원봉사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Nesbit, 2008) 등은 공공정책의 실행에는 인구사회학적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의 존재를 시사한다. 교환의 규칙으로서의 제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 연구결과들은 각각 정책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개인들의 자원봉사참여에 있어 저소득 계층에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거나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편익을 배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영향이 축적되어 사회 내 자원봉사 참여의 평형상태, 즉, 자원봉사 참여의 국가별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사유재소비이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자체는 아니지만, 정부지출의 비영리섹터 민간자원 구축(crowd-out)·구인(crowd-in)효과 논의 속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에도 참여가격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정부개입을 통해 참여제약을 완화하여 개인의 활동을 구인할 수 있다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논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이론이다. 그간 정부행위와 비영리행위 관계 연구들은 사유재소비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오히려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자원봉사 및 기부 등 개인의 비영리활동이 경제활동, 즉,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실제 정부지출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dreoni(1990)는 비영리행위자가 순수한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개인들이 기부를 통해 얻는 개인적 효용이 중요하며 기부행위 자체로부터 얻는 사회적 인정, 명예 등 다양한 만족이 있다는 점(warm-glow effect)을 주목한다. 비영리행위자들(자원봉사자, 기부자)은 전적으로 사회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소비, 기부행위, 사회적 수요의 함수에 의해 기부의 효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Andreoni, 1989·1990).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부행위 자체로부터의 여러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기부의 가격이 낮아지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사적 소비, 사회적 수요, 기부의 함수 속에 기부의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였다(Andreoni, 1989·1990).

Andreoni(1990)의 분석은 이러한 개인들의 선호에 대해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면 저소득층도 기부 가격이 낮아져 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공식적 제도를 통한 개인의 선호 창출, 즉,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출을 통해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자원봉사 참여와 개인의 선호를 조율하여 새로운 평형상태를 산출하는 제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개입으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비선호가 변화되어 참여의 선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정책이 제약을 받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새로운 평형상태가 산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로 기부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정부 개입에 상관없이 자원봉사 참여 자체로부터 의미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과 자원봉사 참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저참여 그룹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정책에 의해 민간으로 자원이 이전될 경우 이러한 정부지출은 개인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자원봉사정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에게 직접 자원이전을 일으키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에 민감한 참여 고비용 그룹의 자원봉사활동 구인 가능성이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정부가 자원봉사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자원이전을 일으켜 자원봉사활동의 구인효과를 일으키고자 할 때, 정부지출의 의도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여도,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합리적 선택의 특성, 개인에 따라 다른 효용의 존재로 인해, 개인마다 다른 차별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tadelmann-Steffen(2011)은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참여에 대해 주효과로서는 구축의 영향을 미치나 소득수준에 따라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오히려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이들의 참여를 구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복지지출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자원이 이전되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여유자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자원봉사 정부지출 역시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제약 요인에 따라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개인마다 다른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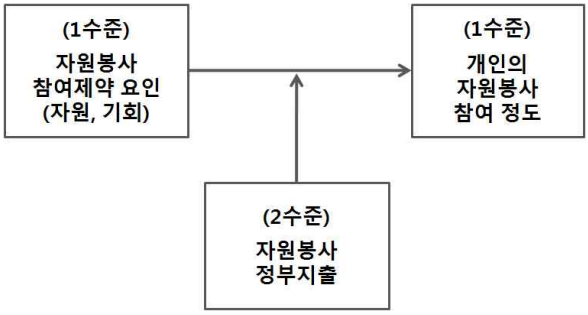
가설2.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자원과 기회 제약에 의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참여 제약에 의한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자원봉사정책의 역할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검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자원(시간, 금전, 지식)과 기회 제약에 따른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차이에 대한 가설과 이러한 차이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해당 가설들에 근거한 다음의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원봉사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이전되는 정부지출이 개인들의 자원봉사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원봉사정책이 실행되는 단위인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지역에 속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 '자원봉사 참여 정도'는 '자원봉사 참여 여부'이며 '자원봉사 참여 여부'의 조작적 정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가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활용한 자료는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이다. 이는 2년마다 조사되는 자

료로 16개 광역자치단체 만 19세 이상 성인 총 34,3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election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을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국가 및 지역행사, 재난재해 구호,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로 본 연구는 자료가 제공하는 모든 범위를 분석에서 포괄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수준 변인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의 참여제약 요인이다. 이는 크게 자원제약요인과 기회제약요인으로 나뉜다. 개인 수준 독립변수는 '자원제약'은 금전적, 시간, 지식 요인 세 가지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기회제약'은 네트워크와 참여관습 두 가지 하위 변수로 구성된다. 개인의 자원봉사참여 제약요인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서 금전 제약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1수준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7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등간척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특정 수준을 기준으로 이분형 변수화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정보량을 유지하도록 연속변수를 유지하여 활용하였다. 자원제약 중 시간 제약요인은 경제활동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2015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경제활동여부는 공식적인 고용상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 여부를 포함하여 측정되었다.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자원제약으로서 기술·지식 제약요인은 학력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학력 초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1수준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4수준이 측정되었다. 이 역시 금전 제약요인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연속변수 그대로 활용하였다.

기회제약은 네트워크 제약과 참여관습 제약요인으로 나뉜다. 네트워크 요인은 단체참여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단체참여는 여러 취미동아리,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 단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는가의 여부만을 측정하였다. 이 역시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활용하였다. 참여관습 제약요인은 이미 형성된 자원봉사문화에 의해 자원봉사 참여자로 요청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원봉사 참여자로 인식되기 보다는 수혜자로 인식되기 쉬운 개인 특성으로 장애보유 여부를 통해 참여관습 제약요인을 조작화하였다. 이는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측정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유무를 통해 측정되었다.

조절변수로서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지역수준 변수로서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집행되는 '자원봉사 정부지출'로서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 규모'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발간하는 자원봉사센터현황(2015)의 2014년도 예산 수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나뉘어 투입되었다. 개인수준에서 투입된 나이, 성별, 가구원수, 기부여부 요인은 기존 연구들에서 자원봉사 참여 선택이나 정도, 의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측정 역시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근거하였다. 투입된 지역수준 통제변수 역시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되는 변수로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공공복지지출 규모, 지역경제 규모, 지역 물가상승률,

지역 인구밀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의 지대추구 규모가 투입되었다(〈표 3〉 참조).

〈표 3〉 변수 측정방식과 자료출처

변수층위와 변수유형		변수명과 측정문항	자료
개인 수준 (1수준)	종속 변수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정도: - 자원봉사 참여 여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 (0: 없음, 1: 있음)	2015 사회조사 (통계청, 2015)
	독립 변수	•자원제약(금전):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1: 100만원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7: 600만원 이상) •자원제약(시간): 경제활동 여부 (0: 미취업 혹은 비경제활동=시간제약 저, 1: 취업 혹은 경제활동=시간제약 고) •자원제약(지식): 학력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이상) •기회제약(네트워크): 단체참여 여부 (0: 단체참여 무, 1: 단체참여 유) •기회제약(참여관습): 장애 여부 (0: 장애인카드 소유 무=비장애, 1: 장애인카드 소유=장애)	2015 사회조사 (통계청, 2015)
	통제 변수	나이 (만19세 이상: 비율변수로 투입) 성별 (0: 남, 1: 여) 가구원수 (1: 1인, 2: 2인, 3: 3인, 4: 4인 이상) 기부여부 (0: 기부 안함, 1: 기부 한적 있음/ 기준: 지난 1년 동안)	2015 사회조사 (통계청, 2015)
지역 수준 (2수준)	조절 변수	•자원봉사 정부지출: 광역자치단체 지역자원봉사센터들의 총예산 (단위: 억원)	지역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집 (행정자치부, 2014, 2015)
	통제 변수	지역경제규모*: 광역자치단체 1인당 GRDP (1인당 지역총생산량, 단위: 백만원) 인구밀도*: 광역자치단체 면적 대비 인구수 (인구/㎢, 단위: 천명) 공공복지지출**: 광역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 (%) 물가상승률**: 광역자치단체별 물가상승률 (%) 지대추구규모***: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 지대추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Katz & Rosenburg(1989) 방식 추정)	*2014 KOSIS (통계청, 2016) **2014 재정고 (행정자치부, 2015) ***송정안(2016)

3. 분석방법

자원·기회제약에 따른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차이에 이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HLM7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여부로 측정되는 자원봉사 참여 정도와 자원봉사 정부지출 규모로 측정되는 자원봉사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가 자원봉사참여 제약요인이라는 개인수준(1수준)과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지역수준(2

수준)의 다층적 혹은 위계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은 이렇듯 개인과 집단차원 변수들이 함께 분석에 포함되는 내포된 데이터(nested data) 혹은 위계적 데이터(hierarchical data)에서 층위가 다른 변수들이 개인수준(1수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Raudenbush & Bryk, 2002). 그런데 본 연구가 활용한 일반화된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HGLM)은 그 중 특수한 경우로, 종속변수(자원봉사 참여 여부)가 이분형 변수로서 정규성과 선형성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 즉, 종속변수가 정규분포 대신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화된 위계적 선형모형은 자료가 다층분석의 가정을 위배하여 HLM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는 이항 로지스틱 다층모형(binominal logistic multilevel model)이 적용된다. 본 연구가 활용한 HLM7 프로그램에서는 베르누이 분포(Bernoulli distribution)를 적용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분석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선택(Y=1) 확률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X라는 독립변수 투입의 조건함수를 검증하는 과정이 된다. 한편, 본 연구는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에 대한 용이한 해석을 위해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1과 가설2에 해당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참여제약에 따른 개인 차이)

η_{ij} = γ_{00}+γ_{01}*자원봉사정부지출+γ_{02}*인구밀도+γ_{03}*공공복지지출+γ_{04}*경제규모+γ_{05}*물가상승률+γ_{06}*지대추구+γ_{10}***개인금전자원**+γ_{20}***개인시간자원**+γ_{30}***개인지식기술자원**+γ_{40}***개인네트워크기회**+γ_{50}***개인참여관습기회**+γ_{60}개인나이*+γ_{70}*개인성별+γ_{80}*개인가구원수+γ_{90}*개인기부참여+u_{oj}

η_{ij}: j지역 i개인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γ_{00}: 전체지역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u_{oj}: 절편의 지역 간 오차

γ_{01}~γ_{06}: 지역변수 고정효과계수

γ_{10}~γ_{90}: 개인변수 고정효과계수

(가설2: 개인차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η_{ij} = γ_{00}+γ_{01}*자원봉사정부지출+γ_{02}*인구밀도+γ_{03}*공공복지지출+γ_{04}*경제규모+γ_{05}*물가상승률+γ_{06}*지대추구+γ_{10}*개인금전자원+γ_{20}*개인시간자원+γ_{30}*개인지식기술자원+γ_{40}*개인네트워크기회+γ_{50}*개인참여관습기회+γ_{60}개인나이*+γ_{70}*개인성별+γ_{80}*개인가구원수+γ_{90}*개인기부참여+γ_{11}***개인금전자원*자원봉사정부지출**+γ_{21}***개인시간자원*자원봉사정부지출**+γ_{31}***개인지식기술자원*자원봉사정부지출**+γ_{41}***개인네트워크기회*자원봉**

사정부지출+γ_{51}***개인참여관습기회*자원봉사정부지출**+[u_{oj}+u_{1j}*개인금전자원+u_{2j}*개인시간자원+u_{3j}*개인지식기술자원+u_{4j}*개인네트워크기회+u_{5j}*개인참여관습기회]

η_{ij}: j지역 i개인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γ_{00}: 전체지역의 자원봉사확률 승산비

γ_{01}~γ_{06}: 지역변수 고정효과계수

γ_{10}~γ_{90}: 개인변수 고정효과계수

γ_{11}~γ_{51}: 상호작용 고정효과계수

[u_{0j}~u_{5j}]: 지역 간 오차

Ⅳ. 연구분석결과

1. 기술분석 결과

본 연구의 자료에서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석에 투입된 자료의 총 표본수는 34,403명이다. 이 중 남성은 47%, 여성은 53%를 차지하였으며, 나이는 최소 19세, 최대 102세, 평균 50.08세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참여 여부는 비참여가 87.7%, 참여가 12.3%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금전 자원제약을 측정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7.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4%, 200~300만원 20.8%, 300~400만원 15.4%, 400~500만원 10.5%, 500~600만원 5.9%, 600만원 이상 8.9%로 분포되어 있었다. 시간 자원제약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여부는 39.1%가 비경제활동 상태, 69.9%가 경제활동 상태로 나타났다. 지식 자원제약에 해당하는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9.1%, 중학교 졸업 이하가 10.6%,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3%, 대학교 졸업 이하가 33%로 나타났다. 기회제약에서 네트워크 요인를 측정하는 단체참여 여부는 48.8%가 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51.2%는 단체참여를 하고 있었다. 기회제약에서 참여관습을 측정하는 장애여부는 장애인카드 비소지자(비장애) 93.9%, 장애인카드 소지자(장애)가 6.1%를 나타냈다.

개인수준 통제변수로서 가구원수는 1인가구 13.8%, 2인가구 30.8%, 3인가구 23.3%, 4인이상 가구 32.2%를 나타냈다. 기부여부는 기부자가 28.8%, 비기부자가 71.2%를 차지했다.

지역수준(2수준) 표본은 16개 광역자치단체로서 조절변수에 자원봉사 정부지출(억원)은 자원봉사센터 예산 규모로 전체 평균 일년 예산은 5.64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51억원과 최대 20.23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지역수준 통제변수인 지역 공공복지지출은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측정되었는데, 평균 25.74%였으며 최소값 14.90 최

대값 35.50로 나타났다. 지역별 경제규모는 지역 경제총생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RDP로 평균 30.37(백만원), 최대 18.90 최소 61.60이었다. 물가상승률은 평균 1.3%로 최대 1.8%, 최소 1.0%, 인구밀도는 평균 2.26(㎢/천명), 최소값 0.09 최대값 16.41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의 지대추구규모(%)는 평균 14.92, 최소값 3.31, 최대값 35.69를 나타냈다.

2. 가설분석 결과

1) 가설1: 참여제약에 따른 개인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자원과 기회 제약을 많이 받는 개인은 그렇지 않는 개인보다 자원봉사 정도가 저조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총 다섯 가지의 자원(금전, 시간, 지식)과 기회(네트워크, 참여관습) 제약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금전 자원 제약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수준과 참여관습 기회제약을 제외한 제약요인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 가설이 검증되었다(〈표 4〉 참조).

경제활동 여부로 측정된 시간 자원제약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시간 자원이 부족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113, S.E.=.041, Odds ratio=.893, p〈.01). 경제활동을 평균에서 1단위 더 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0.893배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확률의 감소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자원제약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의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으로 측정된 지식 자원제약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자원봉사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제약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개인에게 지식자원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은 높아졌다(B=.105, S.E.=.024, Odds ratio=1.111, p〈.001). 학력 및 교육수준이 평균에서 1단위 높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1.11배로 높아져 지식이 자원봉사 참여의 유의한 개인차이를 생성하는 제약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를 덜 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 지식이 유의한 참여제약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 이에 학력으로 측정된 지식자원 역시 제약 요인으로서 지식자원이 부족한 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금전 자원제약을 의미하는 가구소득수준은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차이를 가져오는 유의한 제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B=.016, S.E.=.012, Odds ratio=1.016, p〈.174).

네트워크와 참여관습에 노출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기회 제약요인은 단체참여 여부와 장애여부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보았다. 기회제약에 대한 가설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네트워크(단체참여) 기회제약 가설은 예측대로의 검증 결과를, 참여관습 기회제약 가설은 예측과 다른 검증 결과를 나타냈다.

단체참여 여부 영향의 검증 결과는 네트워크 제약요인이 자원봉사 참여 여부의 개인 차이를 가

져오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준다(B=1.577, S.E.=.047, Odds ratio=4.841, p〈.001). 이는 어떤 한 개인이 단체참여를 평균보다 1단위 더 할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4.841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단체참여를 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개인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그만큼 제약됨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통한 기회제약이 자원봉사활동을 저조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의한 자원봉사 활동 정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장애여부를 통한 참여관습 제약의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예측과 달리 자원봉사 참여의 제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B=.207, S.E.=.081, Odds ratio=1.231, p〈.011). 다시 말해, 장애를 보유한 사람, 즉, 자원봉사 대상이 되기 쉬운 참여관습 상 장애보유자들은 자원봉사 참여 요청을 덜 받을 것이고 이에 기회 제약이 더 노출될 것으로 예상한 그룹이 오히려 예상과 달리 유의하게 더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여부는 장애인카드 소유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장애인카드 소유자들이 보유하는 장애 정도와 유형이 세부적으로 고려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미한 장애 보유인 경우 기회제약이 시간자원과 간섭효과를 일으킨 경우일 수 있다.

〈표 4〉 참여제약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 (가설1)

구 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Coefficient(B)	S.E.	Odds ratio	p-value
절 편 (γ_{00})		-3.716***	0.068	0.024	0.000
지역 수준	자원봉사정부지출 (γ_{01})	0.006	0.010	1.006	0.539
	지역인구밀도 (γ_{02})	-0.005	0.014	0.995	0.715
	공공복지지출 (γ_{03})	-0.030*	0.009	0.970	0.010
	지역경제규모 (γ_{04})	0.001	0.004	1.001	0.874
	물가상승률 (γ_{05})	-0.149	0.283	0.861	0.061
	지대추구 (γ_{06})	-0.021**	0.005	0.980	0.003
개인수준	가구소득 (γ_{10})	0.016	0.012	1.016	0.174
	경제활동 (γ_{20})	-0.113**	0.041	0.893	0.005
	교육수준 (γ_{30})	0.105***	0.024	1.111	0.000
	단체참여 (γ_{40})	1.577***	0.047	4.841	0.000
	장애보유 (γ_{50})	0.207*	0.081	1.231	0.011
	나 이 (γ_{60})	-0.007***	0.001	0.991	0.000
	성 별 (γ_{70})	0.250***	0.037	1.284	0.000
	가구원수 (γ_{80})	0.038	0.021	1.039	0.062
	기부여부 (γ_{90})	1.339***	0.038	3.813	0.000
절편지역분산 (u_{oj})		0.020*** (X^2=74.71, df=9)			
Deviance (-2LL) Chi-square statistic		84285.348 (n of parameter = 17) 4183.846*** (df=15)			

2) 가설2: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가설2의 검증은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개인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으로, 가설1에서 예상한 자원·기회 제약에 따라 나타난 자원봉사활동 개인 차이를 정부지출이 조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참여제약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덜 하게 되는 개인들, 다시 말해, 정부개입이 없이는 참여제약에 더 많이 노출되게 그룹을 구인(crowd-in)할 것이라는 가설에 해당한다.

정책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개인수준 변수에 의한 함수의 기울기 역시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함으로 개인 조절변수들의 무선효과를 함께 검증하였다. 이를 우선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2]. 가설의 검증 결과, 광역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시간 자원제약(경제활동 여부), 지식 자원 제약(학력), 기회 제약(네트워크)에 의해 덜 참여하고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증가시키는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결과 참여제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 간 유의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도 없었다(〈표 5〉 참조).

자원봉사 정부지출과 경제활동 여부의 상호작용항(γ_{21})을 통해 측정해본 결과(〈표 5〉 참조), 가설1 검증결과와 대비해볼 때(〈표 4〉 참조), 자원봉사정책에 의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 여부에 대한 시간 제약의 유의한 효과를 완화하기는 하지만 유의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B=.009, S.E.=.013, Odds ratio=1.008, p=519). 학력으로 측정된 지식 자원제약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조절효과 역시 낮은 학력 보유자들을 더 유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며(B=-.001, S.E.=.008, Odds ratio=.999, p=.979), 네트워크 기회제약에 대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개입 역시 단체참여에 활발하지 않은 개인들에 충분하지 않은 조절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 S.E.=.014, Odds ratio=1.003, p=.880).

〈표 5〉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자원봉사 개인차이 조절효과 (가설2)

구분		자원봉사 참여 여부			
		Coefficient(B)	S.E.	Odds ratio	p-value
절 편 (γ_{00})		-3.715***	0.067	0.025	0.000
지역수준	자원봉사정부지출 (γ_{01})	-0.004	0.012	0.995	0.734
	인구밀도 (γ_{02})	0.002	0.013	1.001	0.975
	공공복지지출 (γ_{03})	-0.026*	0.008	0.974	0.010
	경제규모 (γ_{04})	-0.001	0.004	0.999	0.813

2) 가설2의 검증의 다층로짓분석의 Deviance값을 산출하는 Laplace approximation 추정에서 해당 추정이 허용하는 parameter space가 초과되어 Deviance 비교를 통한 모델 적합도 상승의 유의도는 판별할 수 없었다. 이에 회귀식의 절편과 기울기의 지역수준 오차의 변화와 분산의 유의도를 통해 모델 적합도를 가늠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기술하였다.

	물가상승률 (γ_{05})	-0.061	0.248	0.941	0.811
	지대추구 (γ_{06})	-0.015*	0.005	0.985	0.010
개인수준	가구소득 (γ_{10})	0.017	0.015	1.017	0.227
	경제활동 (γ_{20})	-0.141*	0.063	0.868	0.041
	교육수준 (γ_{30})	0.130**	0.039	1.139	0.005
	단체참여 (γ_{40})	1.567***	0.067	4.794	0.000
	장애보유 (γ_{50})	0.172	0.096	1.187	0.098
	나 이 (γ_{60})	-0.007***	0.001	0.993	0.000
	성 별 (γ_{70})	0.246***	0.037	1.279	0.000
	가구원수 (γ_{80})	0.056**	0.020	1.058	0.004
	기부여부 (γ_{90})	1.334***	0.038	3.797	0.000
상호작용	자원봉사정부지출*가구소득 (γ_{11})	-0.001	0.003	0.998	0.688
	자원봉사정부지출*경제활동 (γ_{21})	0.009	0.013	1.008	0.519
	자원봉사정부지출*교육수준 (γ_{31})	-0.001	0.008	0.999	0.979
	자원봉사정부지출*단체참여 (γ_{41})	0.002	0.014	1.003	0.880
	자원봉사정부지출*장애보유 (γ_{51})	0.013	0.021	1.012	0.530
지역수준분산 (u_{oj})		0.033*** (X^2=19.984, df= 9, p=0.018)			
개인수준분산_가구소득 (u_{1j})		0.002*** (X^2=24.268, df=14, p=0.042)			
개인수준분산_경제활동 (u_{2j})		0.042*** (X^2=34.670, df=14, p=0.002)			
개인수준분산_교육수준 (u_{3j})		0.017*** (X^2=47.394, df=14, p=0.000)			
개인수준분산_단체참여 (u_{4j})		0.040*** (X^2=29.179, df=14, p=0.010)			
개인수준분산_장애보유 (u_{5j})		0.049*** (X^2=19.652, df=14, p=0.141)			

*** $p<.001$, ** $p<.01$, * $p<.05$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설명하는 모델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가설1의 모델과 가설2의 모델 중 더 나은 모델은 가설1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2의 모델은 기울기들의 분산이 감소함으로써 모델이 향상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바로 전단계 모델(가설1)과 비교할 때 기울기의 지역분산이 모두 증가하여 가설1 모델보다 개인의 자원봉사 차이를 설명하는 데 더 나은 모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가설1의 모델은 자원봉사 제약요인과 함께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지역요인과 개인요인들이 투입된 모형이었으며, 기초모형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 적합도(Deviance)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결국 자원봉사정책 예산이 개인 간 발생하는 자원봉사 참여 차이에 대한 어떠

한 작용도 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은 참여제약을 비롯한 개인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의도하는 자원봉사 정책은 정부지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가설1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 가설1과 가설2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의 지대추구규모, 즉, 자원봉사개발 생산활동에 투입되기보다 정책실행 조직에서 비생산적으로 재분배되는 비용의 부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탐색해보는 기존 자원봉사 연구와 달리 자원봉사활동의 개인 차이를 자원봉사 참여제약의 관점을 통해 설명해보는 데 있었다. 참여제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자원과 기회의 제약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원봉사정책이 정부지출을 통해 자원과 기회라는 참여제약에 의한 자원봉사 개인 차이를 조절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원과 기회라는 참여제약에 의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참여 제약에 더 많이 노출된 개인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를 조절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이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지역에 속한 개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의 검증결과, 참여제약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 차이는 시간과 지식에 해당하는 자원제약과 네트워크에 의한 기회 제약에 의한 개인 차이에 대해서 예측대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금전자원 제약과 참여관습 기회제약에 대한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시간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수록 개인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단체참여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회가 줄어들수록 자원봉사 참여 확률도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자원과 기회라는 매우 구체적인 제약요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네트워크 참여기회는 다른 어느 제약보다 큰 효과를 내는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참여기회란 마을조직, 동아리, 동창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참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은 단체활동을 하는 개인 대비 네트워크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가 없어 자원봉사를 하기까지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제약은 참여가격을 높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참여확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기존 연구들(Lee & Brudney, 2009; Rotolo & Berg, 2010)과도 일치하는 발견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 결과,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 차이 조절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정부지출이 개인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별로 다른 구인효과가 이론적으로 제안된 바 있고(Andreoni, 1989), 실제 경험적 분석결과로도 검증된 바 있지만(Stadelmann-Steffen,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특정하여 개인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투입되는 공공자원이 자원봉사 참여 제약에 취약한 개인들의 참여를 구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합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첫째 기존 분석들은 주로 정부지출에서 공공복지지출을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공공복지지출과 자원봉사 정부지출 간에 존재하는 공공자원 규모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들의 저조한 자원봉사참여를 공공복지지출이 차별적으로 구인한다는 점(Stadelmann-Steffen, 2011)과 달리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자원봉사정책을 통해서는 개인이 처한 자원에 의한 참여제약을 넘어설 만큼의 규모로 자원 투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인의 불균등한 참여 차이를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조절하고 있는가가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개인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 바는 없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원봉사 정부지출의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거나 혹은 자원봉사정책 실행방식의 문제 등 광범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통제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정부지출에서의 지대추구 규모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자원봉사정책 실행 과정에서 자원봉사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는 공공자원이 실행조직 수준에서 비생산적 재분배로 누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지역에 속한 개인들로 자원이 충분히 이전되어 자원제약에 노출되어 참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원 지원이 없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룹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자원봉사개발 중간조직의 성장에 보다 기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의한 제약요인인 시간, 지식, 네트워크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방안이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으로 시간이 모자란 그룹, 학력이 낮은 그룹, 단체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그룹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자원봉사정책의 자원봉사 정부지출은 이들 그룹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자원봉사정책을 통해 지출되는 정부예산이 지금보다 더 자원봉사개발 활동에 생산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유형의 제약을 받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제약을 정부가 완화해줌으로써 개인의 참여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낮추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합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알맞은 정책수단은 무엇인가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현행 자원봉사정책이 인구사회학적 자원봉사 참여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행정자치

부, 2013)에 의하면, '자원봉사의 개방성과 소외층의 참여 증진'이라는 정책과제(1-1-3)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책과제의 논리나 실행방식, 정책수단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을 볼 때, 이를 왜 어떻게 실행해야할지의 논리와 근거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비록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노인 등 참여관습에 의해 기회제약에 노출된 그룹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원봉사 활동에서 누가 더 참여하는가보다 누가 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이들을 구인하려는 노력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최지민 외, 2015. 참조). 최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찾아가는 동사무소'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주민복지 공급을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에서 참여관습 기회제약에 노출된 시민들을 포함하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향후 분석방법과 분석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분석방법에 있어, 향후 자원봉사정책이 보다 실행되면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종단분석이 필요하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에서의 제한적 연구결과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다. 분석자료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과 국제 수준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다양화와 세분화도 제안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투입된 자원봉사 활동 정도는 자원봉사 여부로만 측정되었는데 향후 다양한 조작적 정의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의 범위와 대상(장애인, 아동, 노인 등), 장소(동네, 원거리 등)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차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수준 독립변수로 설정된 자원 및 기회의 참여제약 요인들 역시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들이 극복되는 가운데 실증적 연구로서의 자원봉사정책연구가 축적·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김성경. (2007).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자원봉사 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단일호): 1-20.

김성경. (2009). 사회적 자본 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317-337.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83-105.
송정안. (2016).「자원봉사 정부지출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구축·구인효과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오세영. (2011).「자원봉사론」. 창지사.
이민창.(2008). 우리나라 자원봉사 연구의 경향분석.「지방정부연구」, 12(1): 151-175.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보건사회연구」, 35(1): 275-298.
이진이·김태완. (2015). 소득수준과 자원봉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201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91-293.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노인복지연구」, 45(단일호): 317-346.
최지민·이민홍·김상원·김상원·김화환·김순은. (2015).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 패러다임의 가능성: 고령자의 돌봄서비스 공동생산 동기에 관한 연구.「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245-27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4).「자원봉사자와 함께한 센터 20년」.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13).「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행정자치부. (2015).「2015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I·II」
Andreoni, James. (1989).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447-1458.
Andreoni, James.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477.
Andreoni, James., Brown, Eleanor., & Rischall, Isaac. (2003).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1): 111-133.
Apinunmahakul, Amornrat., Barham, Vicky; Devlin, R. Anne. (2009).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the Paid Labor Marke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1): 77-94.
Bartels, Koen., Cozzi, Guido., & Mantovan, Neomi. (2013). "The Big Society," Public Expenditure, and Voluntee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2): 340-351.
Brady, Henry, Verba, Sidney., & Schlozman, K. Leh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02): 271-294.
Bruce, Leane. (2006). Count Me In: People with a Disability Keen to Volunteer. *Australian Journal on Volunteering*, 11(1): 59-73.
Brudney, Jeffrey., & Woodworth, Dayoung. (2014). Overlooking an International Movement in Volunteerism? Understanding Citizen Involvement in Volunteer Centers. In E. Bohne, J. D. Graham, J. C. N. Raadschelders, & J. P. Lehrk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Modern State*, 125-143. Palgrave Macmillan.
Crawford, Sue., & Ostrom, Elinor. (1995). A Grammar of Institu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03): 582-600.

Frumkin, Peter. (2009). *On Being Nonprofit: A Conceptual and Policy Primer.* Harvard University Press.

Granville, Gray. (2000). The Experience of Older Volunteers in Intergenerational School-based Projects, *Voluntary Action*, 2(3): 27-41.

Haski-Leventhal, Debbie., Meijs, Lucas., & Hustinx, Lesley. (2010). The Third-party Model: Enhancing Volunteering through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es. *Journal of Social Policy*, 39(1): 139-158.

Hustinx, Lesley., Cnaan, Ram., & Handy, Famida. (2010). Navigating Theories of Volunteering: A Hybrid Map for a Complex Phenomen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40(4): 410-434.

Inglehart, Ronald. (2003). Modernization and Volunteering. In P. Dekker, & L. Halman (Eds.), *The Values of Volunteering: Cross-cultural Perspectives*, 55-70. New York: Springer.

IVR (2004). *Volunteering for All? Exploring the Link between Volunteering and Social Exclusion*.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Kidd, Alan. (2002). Civil society or the State?: Recent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Voluntary Welfare.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5(3): 328-342.

Lee, Young Joo, & Brudney, Jeffrey. (2009). Rational Volunteering: A Benefit-cost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9(9/10): 512-530.

Lee, Yu Kang, & Chang, Chun Tuan. (2007). Who Gives What to Charity? Characteristics Affecting Donation Behavi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9): 1173-1180.

Lorentzen, Håkon, & Henriksen, Lars Skov. (2014). The Inven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Volunteer Cent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way and Denmark.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3(3): 589-608.

Lukka, Paul., & Ellis, Anne. (2001). An Exclusive Construct? Exploring Different Cultural Concepts of Volunteering. *Voluntary Action*, 3(3): 87-109.

McBride, Amanda. (2006). Civic Engagement, Older adults, and Inclusion. *Generations*, 30(4): 66-71.

Mesch, Debra., Rooney, Patrck., Steinberg, Kathryn, & Denton, Brian. (2006). The Effects of Race,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India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4): 565-587.

Miller, Kimberly., Schleien, Stuart., & Bedini, Leandra. (2003). Barriers to the Inclusion of Volunte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21(1): 25-30.

Musick, Marc., & Wilson, John.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59-269.

Musick, Marc., & Wilson, John. (2007). *Volunteers: A Social Profile*. Indiana University Press.

Nesbit, Rebecca. (2008).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Volunteering: The Impact of Families, Paid Labor, State Policies, and Military Serv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USA.

North, Douglass, C. (1979). A Neoclassical Theory of the State.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20-32.

Raudenbush, Stephen, & Bryk, Anthony.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

Rotolo, Thomas, & Berg, Justin. (2010). In Times of Need: An Examination of Emergency Preparedness and Disaster Relief Service Voluntee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 740-750.

Shepsle, Kennneth, A. (1979).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Equilibrium in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23-57.

Smith, David.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3): 243-263.

Stadelmann-Steffen, Isabelle. (2011). Social Volunteering in Welfare States: Where Crowding Out Should Occur. *Political Studies*, 59(1): 135-155.

Sundeen, Richard., Raskoff, Sally., & Garcia, Mark. (2007). Differences in Perceived Barriers to Volunteering to Formal Organizations: Lack of Time versus Lack of Interest.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7(3): 279-300.

Turner, Lewis. (2006). Face Values: Visible/invisible Governors on the Board and Organisational Responses to the Race Equality Agenda. *Policy Futures in Education*, 4(2): 160-171.

Weingast, Barry. (1979). 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on Congressional No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5-262.

Wilson, John. (201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Wilson, John., & Musick, Marc.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4-713.

송정안(宋庭安): 광운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자원봉사 정부지출이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구축·구인효과에 관한 연구, 2016)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광운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주민자치(자치행정), 거버넌스, 갈등관리, 복지국가론, 국제비교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다층적 영향요인 연구: 지역 공공복지 지출규모와 개인특성 요인을 중심으로'(2016)(2인 공저)가 있다 (jaro2000@naver.com).

〈논문접수일: 2016. 10. 10 / 심사개시일: 2016. 10. 20 / 심사완료일: 2016. 11. 9〉

Abstract

Volunteering as Rational Choice: How Does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Interact with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by Participation Barriers?

Song, Jeong An

This study aims to explain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based on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amine how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interacts with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For this, two hypotheses were posited. First, resource·opportunity barriers would be a significant factor differentiating individuals in volunteering. Second,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would interact with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a way that public resources help individuals more exposed to the two types of barriers volunteer more. The data that this study uses are the 2015 Social Survey by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2015 Volunteer Center Report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Method includes HGLM(binominal logistic multi-level model).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in time·knowledge resource and opportunity by network are mak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volunteering participation choice among individuals. However, government spending on volunteering had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volunteering. Finall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volunteering, rational choice, participation barrier, volunteering policy, governance